

중 신 환경보호법의 특징과 처벌 사례

- 1989 년 이래 25 년 만의 첫 환경보호법 개정 -
- 신 환경보호법 속지 및 대비해야 지속 경영 가능 -

□ 신 환경보호법 개정 배경

- 중국 국무원은 제 12 차 5 개년 계획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, 신 정보처리기술, 바이오, 첨단장비 제조, 신에너지, 신소재, 신에너지 자동차 등 7 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.

7대 신흥전략산업

산업	정책방향
신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0 년까지 비화석 에너지원 소비율 15%로 확대('09 년 8%) - 원자력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
신에너지 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플러그인 혼합동력 자동차와 순 전기자동차 중점 지원 - 정부구매 차량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개인용 자동차로 확대
바이오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이오 산업을 첨단기술 영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- 중점분야: 생물의학, 생물농업, 생물제조, 생물 환경보호
에너지 절약 환경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절약: 2020 년까지 GDP 대비 에너지 소비 20% 감소 ○ 총량통제, 질적개선, 환경리스크 예방 등 환경보호 정책 강화
정보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삼망융합, 첨단 소프트웨어, 신형평판디스플레이 등 집중 육성
첨단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
신소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철, 비철금속, 석유화학, 등 기초 원재료 산업 경쟁력 강화

- 구체적으로 세수 및 금융 관련 정부 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. 전문 펀드 조성, 재정투입 확대, 대출 확대 등을 통해 2015 년까지 GDP 의 8%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임.
- 이 같은 환경보호적 경제발전전략에 맞추어, 기존의 환경보호법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.
- 구 환경보호법은 위법 시 처벌 강도가 약하고, 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 '법 준수' 대신 '위법'을 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. 환경보호법 자체 역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집행하기 어려웠음. 이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,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됨.
- 2014 년 4 월 24 일 신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상무제 8 차회의에서 표결 통과함. 25 년 만에 개정된 중국 환경 분야의 '기본법'(环境保护法)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.

□ 신환보법의 특징 및 달라진 점

- 신환보법의 조항은 기존 47 개에서 70 개로 늘어남.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됨. 첫 번째는 국가의 새로운 경제발전 목표에 부합한 법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행정 집행과 형사사법이 결합돼 위법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.
-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한 처벌 강도 확대
 - 폐수를 불법 배출해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공장 및 오염 초래 가능성이 발견된 공장에 대해 환경보호 부문은 차압 및 압수를 진행할 수 있음.
- ‘일(日) 수에 따른 처벌’로 벌금 상한선 폐지
 - 환경보호 부문의 경고 조치를 받고 나서도 즉각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경고조치 후 익일부터 계산해 일 수에 따른 벌금형이 적용됨. 이에 따른 벌금의 상한선은 없음.
-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 실시 불가
 - 기존 법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. 신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수속을 먼저 밟지 않고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으며, 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경우 모든 사항을 프로젝트 진행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, 벌금도 내야 함.
- ‘블랙리스트’ 제도
 - 환경보호법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감.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은행 대출 및 프로젝트 심사 비준이 불가능함.
- 환경공익소송 과정이 용이해짐.
 - 업체 및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감시 강도를 강화함. 환경오염, 생태파괴,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 피해자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.
-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.
 - 행정구류는 형사법에서만 존재했으나, 7 가지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환경보호법에서도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.

7 가지 위법 행위

1	오염물 부분 및 전체 불법 폐기하는 경우
2	긴급상황이 아님에도 오염물처리시설의 긴급벨브를 열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
3	오염물 처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
4	생산 과정 중 오염물 처리 시설 및 장비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
5	오염물 처리시설의 사용법을 따르지 않아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
6	오염물 처리시설의 고장을 방치하여 오염물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
7	기타 규격에 어긋나는 오염방지 및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
자료원: 환경보호법 제 63 조 제 3 항

- 관련 정부 부문 공무원에 대한 책임 강화
 - 신환보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숨기고 위조 보고하는 경우 직위가 박탈됨. 혹 정부 부문의 거짓 보고 및 위조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경우,

지방정부분관영도(地方政府分管领导), 환보부문(环保部门), 감독부문(监管部门) 등의 주요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.

□ 위법 처벌 사례

- 2015 년 1~4 월 환경보호부 환경검찰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전국 범위 내 ‘일 수에 따른 처벌’ 사건은 160 건, 벌금은 112 억 2951 만 위안에 달함.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섬서성의 공장으로 1580 만 위안임.
- 이 외에도 차압 및 압수 사건 1186 건, 생산 제한, 생산 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698 건, 행정구류를 집행한 사건 429 건, 환경오염범죄 의심자로 선정돼 상달된 안건 429 건임. 이 중 절강성의 차압및 압수 사건 안건은 496 건으로 전체의 42%를 차지
- 사례 1
 - 2014 년 12 월 23 일 충칭자광화공공사는 폐수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나, 환경보호 부문으로 보고하지 않음. 충칭시 환경감찰대는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문을 발행해 경고 조치를 취했음. 그러나 2015 년 1 월 5 일 재조사에서 충칭자광화공공사는 여전히 폐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. 이 업체에 대해 환경감찰대는 ‘일 수에 따른 처벌’을 적용해 경고문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1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총 110 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짐.
- 사례 2
 - 2015 년 1 월 15 일 산둥성 산둥선하악물유한공사가 지하 파이프를 이용해 불법으로 오염물을 폐기한 것이 조사 과정 중에 발견됨. 동영시 환보국은 산둥선하악물유한공사에 1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고, 생산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생산시설을 차압함. 2 명의 담당자는 공안기관으로 넘겨져 행정구류 5 일 처벌을 받음.
- 사례 3
 - 2015 년 3 월 10 일 절강성 항저우시 방평물자유한공사가 축전지폐액을 불법으로 폐기하는 상황이 제보됨. 조사 결과, 회사 앞의 빗물을 받아 놓는 우물에서 자극적인 신 냄새가 났고, 우물의 주변에서 축전지폐액이 발견됨. 독극물을 불법으로 폐기한 이 행위를 ‘환경오염 죄’로 처리해 관련 인사 3 명을 형사구류함.

□ 시사점

- 중국의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됨. 기업과 기업 생산 담당자, 관련 정부부서의 책임자도 법의 보호 및 처벌을 받음. 이는 기존 중국의 ‘관시’ 문화의 폐단을 완화시키고, 전국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.
- 환경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은 중국이 무자비한 환경 파괴를 동반한 ‘경제’ 중심의 발전 모드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‘환경보호’의 역할이 확대된 발전 모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.
-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숙지하고 환경보호 시설 및 관리 제도를 완비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.

자료원: 난징환경국 국장 세미나 참석, 신환경보호법 개정안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